

FTA BRIEF

현장의 목소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해소와

기업 지원 방향」

Vol. 01

March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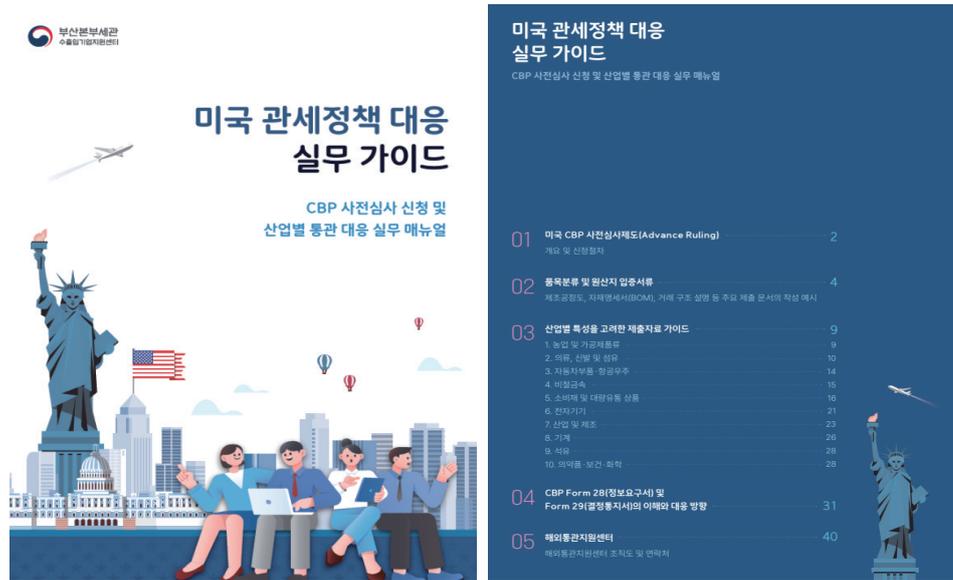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 사진 출처: 관세청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실무 매뉴얼 가이드북 발간

- ☑ 관세청은 대미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미국 CBP 사전심사제도 및 통관 절차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료의 범위 및 작성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매뉴얼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 ☑ 본 실무 매뉴얼 가이드북은 4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안내하고 있다.
 - ① 미국 CBP 사전심사제도 개요 및 신청절차
 - : 사전심사의 법적 근거, 신청 대상·범위 및 신청서 제출부터 회신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 ② 품목분류 및 원산지 입증서류
 - : 품목분류 판단 기준과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제조공정도, BOM 등 핵심 입증자료 작성 방법 제시
 - ③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출자료 가이드
 - : 주요 산업별 리스크 요소를 반영한 필수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
 - ④ CBP Form 28(정보요구서) 및 Form 29(결정통지서)의 이해와 대응방향
 - : 세관의 추가 정보요구 및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절차와 사후 리스크 관리 방안 안내
- ☑ 본 가이드북은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 → 관세행정안내자료 메뉴에서 「CBP 사전심사 신청 및 산업별 통관 대응 실무 매뉴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해소와 기업 지원 방향」



[글_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 구지현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로, 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 성과와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원산지증명서가 적절하게 발급·관리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통관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에게 원산지 증명서는 단순한 구비서류를 넘어, FTA 활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실무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2025년 6월 한국원산지정보원이 605개 FTA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FTA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상위 3개 항목이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31.2%)이었으며, 이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23.1%)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20.5%)이 그 뒤를 따랐다.

●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선택형, 중복 응답 가능)



주 :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0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이처럼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70% 이상이 원산지 입증 및 발급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직접 원산지를 판정·입증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과 발급 서류 준비 및 신청 등 행정적 절차가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고는 지난 6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2월 후속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부터 관리 여건, 서류 준비 과정 등 실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2025년 12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 문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업무 환경, 주요 애로사항,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수요 등으로 구성하여, 발급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실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실제 업무 흐름에 따른 단계별 애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조사에는 총 603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56개사(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견기업 40개사(6.6%), 대기업 7개사(1.2%)가 응답하였다.

업종별 응답 비중은 기계류(27.9%)가 가장 높았으며, 화학공업제품(17.1%), 섬유류(12.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4%), 철강금속제품(9.3%), 전자전기제품(8.6%)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이 주요 응답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응답 기업의 산업군별 분포는 2025년도 기준 FTA 수출기업의 산업군별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 본 설문조사의 응답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산업별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수출기업 산업군별 응답 비중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환경 및 입증 서류 관리 실태



(1) 발급 업무 환경 실태

응답 기업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발급을 활용하는 기업은 34.8%(210개), 자율발급은 32%(193개), 자율·기관 병행 발급은 33.2%(200개)로 나타나, 발급 방식이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FTA 활용 기업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7%가 '보통'이라고 답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호' 또는 '매우 양호'로 평가한 기업은 33% 수준이었으나, 14.4%의 기업은 여전히 발급 환경이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발급 업무 환경은 특정 평가로 치우치기 보다, 다수의 기업이 평이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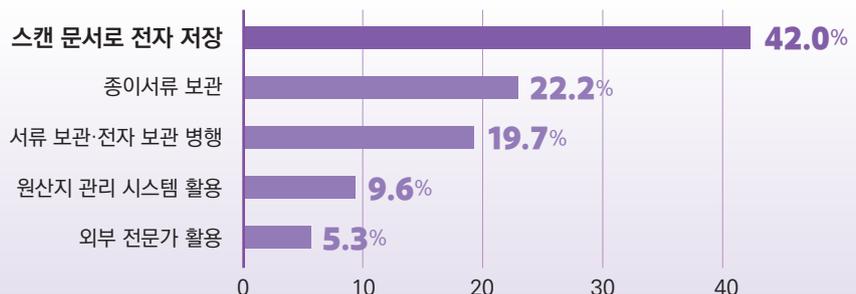
한편,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사유로 인력 부족(31.0%)과 전문성 부재(2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협력사 공조 미흡(10.3%), 내부 지침 및 시스템 불편(각 9.2%)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원산지 발급 및 관리 업무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는 전문적 업무 영역임을 보여준다.

(2) 증빙서류 보관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 실태

원산지증명서 보관 방식을 살펴보면, 스캔 보관 방식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종이 서류 보관은 22.2%, 서류·전자 병행 보관이 19.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6%에 불과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비중도 5.3%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의 수기 방식이나 단순 전자 저장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TA 활용 기업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 등 관리 현황

Q 귀사에서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 등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545개사)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업무방식 익숙함(2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체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18.7%)'과 '운영 인력 부족(18.5%)'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내부 사용자의 시스템 이해도 부족(12.7%)' 및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 어려움(8.1%)' 등도 시스템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스템 도입 여부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여건, 인적 역량,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원산지관리 시스템은 기업별 실무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및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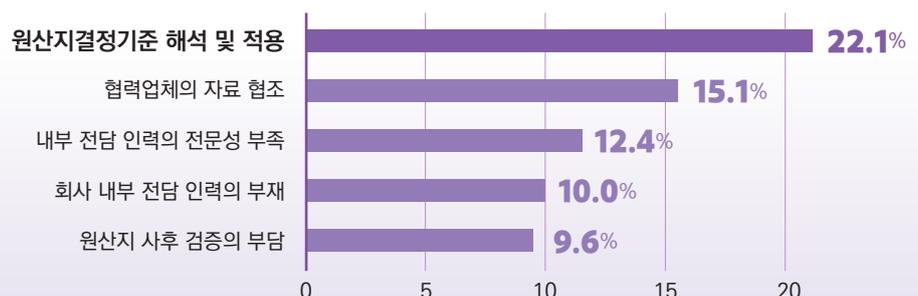
(1) 주요 애로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원산지결정 기준의 해석 및 적용(22.1%)'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전문 용어가 많아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고, 특히 원산지결정 기준 판정의 기초가 되는 BOM 작성 시, 원재료 HS Code 확인과 제조원가 계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검토해야 하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부담"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도와 실무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협력업체의 '자료 협조 미흡(15.1%)'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원재료의 원산지나 제조 공정 정보는 실제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협력사(부품 공급업체)의 협조 없이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부 전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12.4%)과 인력 부재(10.0%) 역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애로사항 TOP 5

Q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애로를 겪는 서류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86.1%가 '수출 거래 서류'보다 '원산지 입증 서류' 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 서류별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32.9%), 원재료명세서(28.5%), 원산지소명서(15.2%),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15.2%) 순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와 제조 공정 정보를 증빙하는 단계에 부담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원산지 입증 서류 준비가 어렵다고 인식한 이유로는 협력 업체 자료 수집의 어려움(50.9%)이 가장 많이 응답 되었으며, 이어 서류 준비 및 작성의 복잡성(11.4%), 협력사 교육 부담(9.8%), 원산지 판정 기준 해석의 어려움(9.6%), 전문성 부족(7.1%), 비용·시간 부담(6.4%)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의 부담이 특정 서류나 절차에 국한되기보다는, 협력사와의 자료 연계, 제도 이해 수준, 내부 관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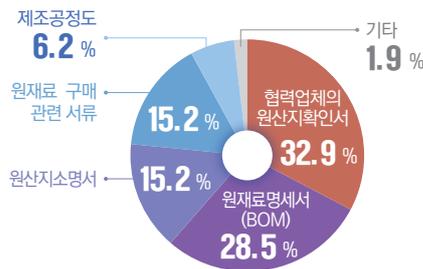
●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준비가 가장 어려운 서류와 이유

Q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작성 또는 준비가 가장 어려운 서류는 무엇입니까?

원산지 입증 서류
86.1 %



원산지 입증 서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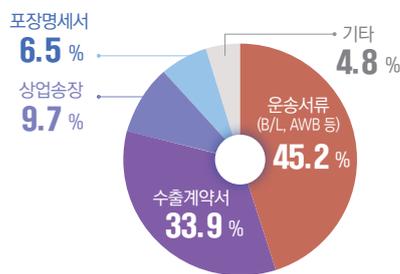
어려운 이유 TOP3

- 1위** 협력업체 자료 수집
- 2위** 서류 준비 및 작성의 복잡성
- 3위** 협력업체 발급 서류를 위한 협력사 교육 부담

수출 거래 서류
10.3 %



수출 거래 서류 종류



어려운 이유 TOP3

- 1위** 서류 작성의 복잡성
- 2위** 협력업체 자료 수집
- 3위** 조직 및 전문성 부족

전반적으로 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내부의 전문 역량 확보와 외부 공급망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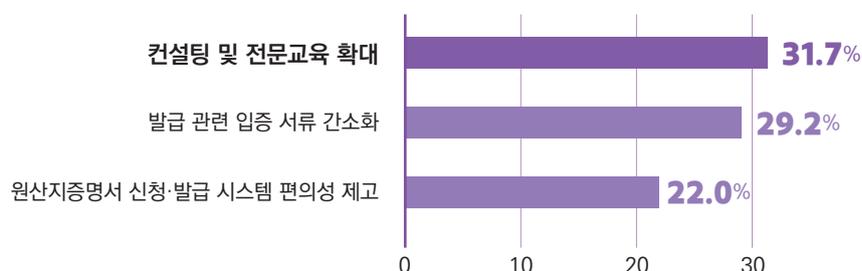
(2) 정책 수요

설문 응답 기업들은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컨설팅 및 전문교육 확대(31.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원산지 입증 서류 간소화(29.2%)'와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제고(22.0%)'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를 위한 우선 지원 정책 상위 TOP 3

Q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정부나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컨설팅 및 전문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산업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학, 기계, 농산물 등 제품군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증빙 요건 등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원산지 판정의 핵심인 HS Code 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일대일 컨설팅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의 원격 자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외국인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지역별 거점 교육 확대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교육 수요층을 보다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입증 서류 간소화'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정보 및 제조 공정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 업체로부터의 자료 취합 단계가 FTA 활용의 주요 병목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과 협력업체 간 원산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제조원가계산서, 제조 공정도 등 현재 권고 서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증빙 자료들을 표준화하여, 서류 작성 및 검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수요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용 편의성 제고'와 관련하여, 실무자의 숙련도에 따른 활용 효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숙련된 담당자와 달리 경험이 부족한 실무자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시스템 인터페이스(UI/UX) 고도화와 함께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지침(Overleaf Notes)¹⁾의 인쇄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원산지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EODES) 확대 추세에 맞추어, 데이터 직접 교환 방식으로 증명 체계를 고도화하거나 뒷면 지침을 전자적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실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교육 훈련, 상담 서비스 등 실무 지원 기능의 내실화와 함께 제도적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보완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 한계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설문조사 결과,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 활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발급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무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증빙자료 확보, 원산지 판정기준 해석, 사후 검증 대응 등 발급 전·후 업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 기업은 발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제도·시스템·전문성 측면에서 다양한 실무적 어려움을 함께 언급하였다. 이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규정 해석과 시스템 활용 지원 등 실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규제 준수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무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대다수의 애로사항은 이를 운영하는 '실무 역량의 편차'와 '전담 인력의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고도화와 지속적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자의 숙련도에 따라 FTA 활용 성과가 좌우되는 '인적 전문성 의존'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지원의 핵심은 제도적 절차 개선을 넘어, 업종별 전문가 매칭과 실무형 교육 체계를 내실화함으로써 현장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FTA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와 지원 체계가 기업의 실무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FTA 활용 기반이 보다 견고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1) 현행 규정상 원본에 뒷면에 작성 지침(Overleaf Notes)은 반드시 양면 인쇄되어야 하고 상하 방향이 일치해야 하는 등 형식적 요건이 요구되나, 출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 출력력이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단순 인쇄 오류에도 재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OPEN

공공누리



출처 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 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773022 798002 03

ISSN 3022-7984